

자유, 사적 소유, 경쟁 - 시장경제의 자원배분*

이 승 훈**

논문초록

사회가 허용하는 자유와 사적 소유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위해를 감수하기로 합의한 항목에 한한다. 이기적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의 사적 소유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제도가 사유재산권제도다. 부족한 것을 얻으려는 인간 행동은 경쟁으로 표출되는데 시장경제의 경쟁은 재산권을 이전 받으려는 경쟁이고 실체를 먼저 찾는 경쟁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않아야 공정 경쟁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외부성이 없을 때 경쟁균형은 자원을 파레토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논증한다. 동태적으로 시장의 상벌기능은 가격조정을 통하여 자원과 노력을 사회적으로 모자라는 상품의 생산으로 인도한다. 사람들은 경쟁을 통하여 재산권을 취득하고 또 이전하는 데 합의하는데,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는 그 결과다. 시장실패는 재산권보호 실패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로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소득분배의 공정성도 왜곡한다. 시장경쟁이 공정하면 소득분배도 공정하다. 그러므로 복지혜택은 수혜자의 권리가 아니라 제공자의 배려다.

핵심 주제어: 자유, 사적 소유, 경쟁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D0, P1

투고 일자: 2016. 4. 8. 심사 및 수정 일자: 2016. 11. 22. 게재 확정 일자: 2017. 1. 10.

* 이 원고는 2016년 2월 한국경제학회 총회 발표의 강연록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의 논평에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mail: shoonlee@snu.ac.kr

I. 서론

사적 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근간이고 사람들은 이 토대 위에서 각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이기적 개인행동은 결국 경쟁으로 표출되고 시장경제의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는 이 경쟁의 동학이 실현하는 성과다. 경쟁을 가동하는 기본 틀이 사적 소유와 경제적 자유인만큼 시장경제의 자원배분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가 사적 소유와 경제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입 시행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모든 경제문제의 뿌리에 놓인 것은 자원의 희소성이다. 사람들은 희소한 자원을 한편으로는 알뜰하게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다툰다. 자원의 알뜰 사용과 더 많이 가지려는 다툼은 결국 효율적 자원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상적 자원배분 기제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배양 발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도록 이끌면서 그 과정의 분쟁은 합리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자유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사적 소유는 개인이 물자 등을 사사로이 가지는 것을 뜻한다. 탐욕은 자신의 사적 소유를 확대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렇게 행동한다. 즉 자유와 사적 소유의 허용은 일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탐욕의 포로로 만든다. 과거의 지배층은 이 우려를 내세워 서민들을 자유와 소유로부터 철저히 배제하였다. 그 결과 자유와 사적 소유는 그들만의 특권으로 유지되어왔다.

도둑질에 대한 징벌이 상고시대의 기록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적 소유의 역사는 일찍부터 시작하였다.¹⁾ 그러나 소유가 가능한 품목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 보호도 매우 자의적이어서 현대적 재산권과는 비교할 수준이 못된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자유와 사적 소유의 대중화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는데 역사적으로도 자유의 발전과정은 사적 소유의 확대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자유와 사적 소유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개념이다. 나 홀로 사는 세상이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든 문제될 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행동할 때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1) 멀리는 함무라비 법전, 가까이는 부여의 법규에 이르기까지 고대 왕국들은 예외 없이 도둑을 벌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II. 자유와 사적 소유

1. 밀(J. S. Mill)과 로크(J. Locke)

자유와 사적 소유의 주장이 제기되는 곳에서는 으레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유와 사적 소유의 허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피해를 고찰한 뒤에 결정할 일이다. Mill(1859)은 개인의 자유행사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위해원칙(hazard principle)’을 제창하였다.²⁾ Locke(1960)는 개인이 자연에 노동을 가하여 얻은 성과는 그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단 뒷사람도 같은 취득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 조건을 ‘로크 부대조건(Lockean Proviso)’이라고 부른다.³⁾

‘위해원칙’이 허용하는 개인의 자유와 ‘로크 부대조건’에 맞는 사적 취득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 홀로 세상’의 자유 및 사적 소유와 같다. 그런데 자유와 사적 소유의 허용기준을 ‘위해원칙’과 ‘로크 부대조건’만으로 한정하면 그 허용 폭은 크게 제한된다. 고도로 상호의존적인 현대의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생업활동은 주변과 다투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자유와 사적 소유를 이처럼 제한해버리면 생업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말 것이다.

현실을 보면 다른 이에게 피해를 가하고 취득 기회 훼손의 피해를 주더라도 합당한 조건만 충족하면 자유와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와 사적 소유는 반드시 피해자들의 반발을 유발하기 마련인데 현실 제도는 이 반발을 어떻게 처리할까? 본고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생계위협은 매우 강력한 자유구속의 수단이나 사적 소유만 충분하다면 위협당하

2) Mill(1859)은 “On Liberty”에서 “the only purpose for which power can be rightfully exercised over any member of a civilized community, against his will, is to prevent harm to others”라는 구절로 묘사하고 있다.

3) Locke(1960)는 “For he that leaves as much as another can make use of does as good as take nothing at all. Nobody could think himself injured by the drinking of another man, though he took a good draught, who had a whole river of the same water left him to quench his thirst.”라고 하였다.

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사적 소유 금지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복종을 강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Trotsky, 1936: Hayek, 1960에서 재인용).⁴⁾ 사적 소유의 자유도 자유의 일종이지만 이 자유는 각자가 자신의 자유를 지킬 능력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자유다. 본고에서는 사적 소유의 비중을 자유 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기로 한다.

2. 자유의 허용

특정 자유의 허용은 이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침탈할 외적 속박을 척결해야 가능하다. 척결 대상으로는 각종 구조적 요인은 물론 이 자유를 침탈할 다른 개인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사람들이 허용된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그 행사를 방해하려는 모든 요인과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각자에게 허용된 자유는 그 사람만이 지배하는 고유한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을 구축하는데 이 사적 영역은 정부라도 침범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이렇게 구축된 개인별 사적 영역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동은 정부의 단속 대상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구체적으로 자유를 허용하면 개인생활은 자유를 보장받는 사적 영역과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공적 영역으로 나뉘는데 자유의 허용기준이 그 경계를 결정한다.

Mill의 ‘위해원칙’은 남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는 모든 ‘비위해적 자유’를 이 사적 영역에 귀속시킨다. 피해를 가하는 ‘위해적 자유’는 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들만 사적 영역에 편입된다(Mill, 1859). Hayek(1960)는 자신의 목표 달성에 다른 사람을 그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동원하는 일은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남을 ‘강제할 자유’는 어떠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해적 자유’의 허용 기준은 ‘비위해적 자유’를 한 쪽 끝으로 하고 ‘강제할 자유’를 다른 한 쪽 끝으로 하는 자유의 스펙트럼을 특정 위치에서 양분한다.

4) Trotsky의 말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굶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굶는 사회’가 된다.

Leon Trotsky, *Revolution Betrayed*, 1936. “In a country where the sole employer is the State, opposition means death by slow starvation. The old principle: who does not work shall not eat, has been replaced by a new one: who does not obey shall not eat.”

학자들은 이 경계가 자연법(natural law) 또는 자연권(natural rights), 공리주의적 원리, 본원명령(categorical imperative), 또는 사회계약(social contract)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한다(Berlin, 1958/1969). 그러나 결정근거가 자연법이든 공리주의든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학자들의 설명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 결과가 자연법 등에 근사하게 부합한다는 말이다.

3. 동등자유 의 법칙과 기회균등

근대의 시민혁명은 그 동안 절대군주가 혼자 누리던 무제한적 자유를 박탈하는 사변이었다. 혁명의 이상은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유를 누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자유 허용에 대한 기본적 합의는 모든 이들이 꼭 같은 자유를 누린다는 원칙이다(Spencer, 1851).⁵⁾ 어떤 ‘위해적 자유’가 꼭 같이 허용되면 모든 사람이 그 자유를 행사하지만 동시에 각 개인은 그 대가로 다른 이의 같은 자유행사가 야기하는 위해를 수용해야 한다.

결국 내가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해를 다른 사람이 수용하려면 나도 그가 같은 자유를 행사하면서 내게 끼치는 위해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 다른 이의 자유행사가 주는 위해를 감수하는 대가로 나는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이익을 누린다. 그러므로 각자 자유 행사로 얻는 이익이 그 대가로 감당할 피해보다 더 크다면 그 자유를 허용하는 데 대한 사람들 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동등자유 의 법칙이 관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갑돌이는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데 갑순이는 소형 마티즈를 살 돈도 없다. 을순이는 영어에 능숙하여 세계 각국을 여행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을돌이는 해외여행이 겁날 뿐이다. 돈이나 능력이 필요한 일을 할 자유는 돈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허용될 뿐 돈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돈과 능력을 고루 갖추지 못하면 동등 자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누구라도 충분한 돈과 능력을 신규로 취득한다면 페라리와 해외여행을 즐

5) Spencer(1851)는 자유의 핵심을 상호성으로 규정하고 ‘동등자유 의 법칙(the law of equal liberty)’을 제창하였다. “each has freedom to do all that he wills provided that he infringes not the equal freedom of any other.”

길 수 있다. 신규 취득이 자유로운데도 취득에 실패한 탓에 페라리나 해외여행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이 상황은 유독 갑순이와 을돌이만 콧 꺾어서 페라리나 해외여행의 자유를 금지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돈과 능력을 얻을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실제 취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허용되는 것은 돈과 능력이 아니라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자유다. 누구나 돈과 능력을 얻고 싶지만 모두 다 취득에 성공하지는 못한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자유는 돈을 벌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할 자유다. 즉 동등 자유의 법칙이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다.

4. 위해, 자유, 자발적 상부상조

특정 ‘위해적 자유’의 허용,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결정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결국 사회적 합의라는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⁶⁾ 허용하기로 합의된 자유는 행사해도 되지만 합의 조건을 위반하면 단속 처벌 받는다.

사상, 양심, 언론,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자유다. 그런데 지배권력은 이들 자유를 수시로 탄압하고 일반인들도 타인의 생각과 언동에 흔히 불쾌감을 느낀다. 즉 이들 자유는 분명히 ‘위해적 자유’다. Mill (1859)은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그에 반대하는 다수가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보장하려면 사상, 양심, 언론, 그리고 결사의 자유 등의 ‘위해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이들 자유의 허용이 분명히 위해는 야기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혁신은 기존의 구식 생업을 도태시키고, 탁월한 성공은 성취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경쟁 패배자가 당하는 생업 상실이나 열등감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피해이지만 혁신이나 탁월한 성취 등을 추구할 ‘위해적 자유’는 현실에서 허용된다. Mill (1859)은 공정한 경쟁은 패배자가 당하는 피해

6) Mill (1859)은 “Secondly, that for such actions as are prejudicial to the interests of others, the individual is accountable and may be subjected either to social or to legal punishments, if society is of opinion that the one or the other is requisite for its protection.”이라고 하였는데 이 조건은 일부학자들에게 ‘사회적 권위 원칙(social authority principle)’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다 더 큰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고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기본적 자유와 경쟁의 자유 등 ‘위해적 자유’의 허용에 실제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이며 더 큰 사회적 이익은 이 동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배경이다.

‘위해원칙’의 본질은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자유는 허용하자는 것이다. 자유사회에서 ‘위해적 자유’의 허용은 그 자유가 유발하는 위해를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할 때 가능하다. 피해자들이 각자 당할 피해를 받아들이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해당 ‘위해적 자유’의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현대 사회의 상부상조 기제는 이 측면을 잘 보여준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 각자의 목표 달성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유사회에서는 강제동원이 불가능하므로 서로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나서 주어야 한다. 내가 남들을 돕는 일에 나서는 까닭은 나도 다른 자유인들의 자발적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도움 주고받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주는 도움은 매우 요긴하다. 그러나 이 도움을 얻으려면 나도 남을 돕는 노고를 각오해야 한다. 즉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위해적 자유’를 함께 누리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도움 제공의 고통보다 받는 도움의 이익이 더 크면 자발적 상부상조는 스스로 발생한다. 고도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하는 현대 자유사회는 반드시 자발적 상부상조의 기제를 한 축으로 삼는다.

5. 사회적 합의의 시행과 정부

‘위해적 자유’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그러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절충한다면 각자 자유를 누리면서 얻는 편익이 남들의 같은 자유 행사로 인해 당하는 자신의 손실을 능가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탐색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탐색이 성공하고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합의는 효력을 잃고 자유화도 표류한다.

합의이행 보장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에게 합의 이행을 강제할 힘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행사가 부실하다면 각 개인은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다른 개인과 개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자유사회가 자유를 창달하는 데 정부의 강제력 행사가 필

요하다는 말은 역설이지만⁷⁾ 자유침탈을 막는 강제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부여받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그 강제력은 오히려 자유화를 훼손하는 또 하나의 외적 속박으로 둔갑한다. 정부의 이러한 자의적 일탈을 막는 방법이 법치주의(rule of law)다. 강제력 행사를 사전에 법제의 형태로 결정하여 공고하고 실제로 그대로만 시행하는 것이다. 징벌내용과 징벌대상 행위를 사전에 공표하는 투명성과 회피가능성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에 따른다는 합법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조문의 서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하고 정부는 특정인의 행위가 이 조문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였음을 입증할 때만 그 행위를 단속 처벌할 수 있다.⁸⁾ 법의 내용은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예측 가능해야 한다.⁹⁾ 또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행사 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법 활동까지 반드시 따르고 준수해야하는 대원칙이다(Hayek, 1960).

6. 자유화와 자유실패

자유화의 초기에는 자유를 ‘속박으로부터의 해방’만으로 인식하는데 기존 질서의 파괴는 으레 과도기적 혼란과 무질서를 불러온다. 자유화가 속박을 척결하면 개인 간 자유가 서로 충돌하기 시작하므로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자유를 보호하고 관철해야 한다. 해방된 인류는 곧바로 속박에서 해방된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나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속박일 수 있다는 상충적 사실과 맞닥뜨렸다.

자유의 상충적 본질에 대한 이해가 미숙하면 ‘위해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진하다. 각자의 자유가 서로 침탈하는 혼란이 절충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7) Hayek(1961)는 “Freedom and Coercion: Some Comments on a Critique by Mr. Ronald Hamowy,”에서 ‘But to prevent people from coercing each other is to coerce them. This means that coercion can only be reduced or made less harmful but not entirely eliminated,’라고 말하였다. 또 Hayek(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에서 ‘It is here that coercion of one individual by another can be prevented only by the threat of coercion’이라고 말하였다.

8) Under the rule of law, government can infringe a person's protected private sphere only as punishment for breaking an announced general rule. Hayek(1960) 전체서 p.312.

9) The essential point is that the decisions of the courts can be predicted, not that all the rules which determine them can be stated in words. Hayek(1960) 전체서 p.316.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무질서에 지친 대중은 단기적으로 자유화에 실망하고 이에 편승한 복고적 반동운동이 다시 권위주의 체제를 부활시킨다.

이처럼 자유화가 혼란에 빠지면서 다시 새로운 속박에 억눌리는 현상은 자유화가 스스로 자유를 망가뜨리는 역설이다. 현실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자유화 현상의 동학을 ‘자유실패(freedom failure)’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속박을 거부하는 데 성공한 자유화가 곧 다시 새로운 속박에 빠지는 자유실패는 지속가능한 자유의 지혜를 터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유실패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은 각자 지켜내야 할 자유와 고집하지 말고 포기해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체득한다. 기본적으로 각자 자유의 행사로 얻는 편익이 다른 이의 같은 자유 행사가 야기하는 위해를 능가하면 그 자유를 허용하는 데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 이 관찰은 시장이 외부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코즈정리(The Coase Theorem)’와 맥을 같이 한다. ‘위해적 자유’ 행사의 특권은 남들의 같은 자유 행사가 빚는 위해를 감수하는 사람만 누린다. 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자유실패의 악순환은 끝난다.

Ⅲ. 탐욕과 사적 소유

1. 탐욕의 발원은 저장의 지혜

원시공동체의 수렵채취 활동은 그 집단이 소비해낼 수 있는 만큼의 식품을 얻는 선에서 그친다. 당장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채취할 뿐 결코 자연을 과다하게 훼손하지 않는 행태는 포악한 맹수나 원시 인류나 서로 다를 바 없었다. 이미 포식하여 더 사냥하더라도 지금은 먹을 수 없고, 나중에 먹으려고 남기면 곧 부패해버리는데 욕심을 부릴 까닭이 없다. 또 각자 가진 것이라고는 하루 분 식품 정도로 강탈해도 얻는 것이 별로 없으니 목숨 걸고 다툼 일도 없다. 더 탐해도 이익이 없으므로 더 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든 맹수든 마치 스스로 탐욕을 절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면 인류는 수렵채취 중심의 생활을 탈피하고 목축과 농사를 주업으로 삼기 시작한다. 목축과 농사의 생산물인 가축과 곡물은 저장 가능한 내구적 생산물이다. 당장 먹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것은 저장해 두었다가 뒷날 쓸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잉여의 축적도 이 시기부터 일어나기 시작

하였다.¹⁰⁾ 그리고 축적이 늘어나면서 약탈로 얻는 이익도 커졌다.

많이 생산하고 비축하려면 그만큼 힘을 더 많이 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 주인만 제압해버리면 간단히 토지와 비축물을 빼앗을 수 있다. 내 힘만 충분하면 토지를 빼앗고 원 주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장기간 착취할 수도 있으니 가장 수익성 높은 ‘생산’활동은 약탈과 전쟁이다. 순수하고 인간미 넘치던 원시인류도 드디어 탐욕으로 오염되었고 강한 자는 거리낌 없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였다.

2. 탐욕 통제와 사적 소유권

저장물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생산 활동은 당장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취득을 겨냥하여 그 규모를 크게 늘렸고, 다른 한 편으로는 토지와 재부를 서로 차지하려는 다툼을 치열하게 벌였다. 고삐 풀린 탐욕이 밀어붙인 사유 확대의 다툼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 투쟁의 세계에서는 내 것은 내 힘으로 지켜내야만 내 것으로 남았다. 사람들이 지키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생산 활동은 그만큼 위축된다. 지킬 필요가 커지면서 방위 전문의 무사 집단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고대 군주국가를 세웠다. 군주는 다른 도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수호자이면서 동시에 백성을 수탈해가는 도적이기도 하였다.

군주가 더 많이 수탈하려면 백성들이 노력과 시간을 생산 활동에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국가의 체제는 바뀌어 왔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도 기본 목표는 결국 외적의 약탈을 막는 국방과 내부의 도적을 막는 치안이다. 사유재산권의 확정과 보호는 치안 확립에 필요한 탐욕 규율의 질서수단으로 발달한 제도다.¹¹⁾

사유재산권 제도의 핵심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취득한 생산인여를 사회가 취득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것들이 많으면 서로 차지하려는 개인의 탐욕들이 도처에서 충돌한다. 분쟁이 일어날 때마

10) 축적의 결과는 자본인데 capital의 어원은 인도-유럽 어계의 caput로서 그 뜻은 소의 머리(頭), 즉 머리라고 한다.

11) 멀리는 함무라비 법전, 가까이는 부여의 법규에 이르기까지 고대 왕국들은 예외 없이 도둑을 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유재산권 제도는 사적 소유의 탐욕을 통제하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다(Carlyle and Carlyle, 1928: Pipes, 2000/2008에서 재인용).¹²⁾

3. 사적 소유의 전개

목초지와 경작지는 유목 또는 정착농업의 필수 요소다. 무주지는 최초 점유자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점유의 평화는 오래 갈 수 없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터전 쟁탈전도 늘었기 때문이다. 기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최초점유의 권리(Right of First Occupancy)”를 내세워 자신의 점유지와 그 땅에 수반된 가축과 농작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Pipes, 2000/2008, p. 162).

그러나 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객관적 원칙이 아니라 점유자의 물리력이었다. 도전받을 때마다 점유권은 힘센 자에게 넘어갔고 이 투쟁의 최종 승자 집단은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지배층으로 군림하였다(Harrington, 1992).¹³⁾ 그 결과 대부분의 사적 소유는 남들이 개척한 토지와 비축물을 빼앗아 차지한 성과였고, 생산과 축적의 노역을 담당한 서민들은 언제나 사적 소유의 주변부에서 가진 것 없이 소외당할 뿐이었다.

결국 이 시기의 소유권은 사회가 공인하고 보호함으로써 유지되는 문명사회의 제도화한 권리가 아니라 단지 점유자의 강한 힘이 뒷받침하는 점유상대였을 뿐이었다. 힘없는 서민들의 사적 소유는 그 규모가 미미하였고 지배층의 눈길이 관심을 두지 않는 변두리에서나 가능하였다. 재산권을 비롯하여 이 시대에 도입된 제반 사회제도는 지배층이 약탈로 차지한 기득권이나 보호하는 장치였다(Rousseau, 1754: Pipes, 2000/2008에서 재인용).¹⁴⁾

12) Carlyle and Carlyle(1928: Pipes, 2000/2008에서 재인용)은 “*Medieval Political Theory, V*”에서 “사적 소유는 워낙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원시적이고 자연스러운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소유권은 단지 인간이 필요한 것을 사용할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 본성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권리의 행사에 대해 공식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적 소유는 정말로 인간의 악의적 성향을 통제하고 중화시키려는 목적의 또 다른 규율제도다.”라고 하였다.

13) Harrington(1992: Pipes, 2000/2008에서 재인용)은 “*The Commonwealth of Oceana; and a System of Politics*”에서 절대군주제는 군주가 토지로 대변되는 부의 전부, 혹은 적어도 2/3 이상 소유할 때 생겨난다. 귀족이 그만큼의 부를 소유할 경우 귀족정치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민혁명이 구체제를 혁파하면서 기득권은 상당부분 무너지고 시민의 사적 소유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Pipes, 2000/2008).¹⁵⁾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세력이 그들의 사유재산을 모두 잃은 것은 아니었다. 인클로저(enclosure)에서도 강압적 토지 점유의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근대에 이르러 비록 많은 서민이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적 소유를 늘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사적 소유구조가 약탈에 연원을 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재부의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것이다. 전통적 농업자본의 기여도 일부분 있지만 새로운 축적의 주류를 주도한 집단은 지주들이 아니라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신흥 산업가들이었다. 이들이 축적한 재부의 규모가 전통적 지주들이 보유한 재부를 크게 압도하면서 사적 소유에서 약탈적 연원의 유산이 점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4. 사적 소유의 효능과 유형

탐욕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개별 사적 소유의 확대다.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 생산의 성과에서 나오므로 각자 생산에 주력하면 자신의 소유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하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가로채면 내 사적 소유는 늘어난다. 탐욕은 생산 활동을 독려하기도 하지만 남의 것을 편취하는 일탈로 빗나가기도 한다.

사유재산의 보호가 잘 되는 사회에서는 생산 노력의 강화가 탐욕 충족의 지름길

14) Rousseau(1754: 서은경, 2008에서 재인용)는 “*Discourse on Inequality*”에서 “The first man who, having enclosed a piece of ground, bethought himself of saying ‘This is mine,’ and found people simple enough to believe him, was the real founder of civil society. From how many crimes, wars, and murders, from how many horrors and misfortunes might not any one have saved mankind, by pulling up the stakes, or filling up the ditch, and crying to his fellows: Beware of listening to this impostor; you are undone if you once forget that the fruits of the earth belong to us all, and the earth itself to nobody.” Proudhon(1840: 서은경, 2008에서 재인용)은 “*What is Property? Or,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 of Right and of Government*”에서 “Property is theft!”라고 선언하였다.

15) Pipes(2000/2008)는 1789년 5월 프랑스의 삼부회가 (평민의) 소유와 더불어 자유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신성한 권리로 규정한 cahiers de doléances 제정하여 봉건권리의 철폐를 정당화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다. 그러나 남의 것을 쉽게 가로챌 수 있는 사회라면 편취의 유혹이 강하게 작동한다. 열심히 일한 성과를 쉽게 편취 당하는 분위기에서는 생산의욕도 크게 꺾일 것이다. 사유재산권제도의 이상은 직·간접적 생산 참여로 얻은 성과는 그 사람의 사적 소유로 인정하고 이 사유재산은 정부가 엄격하게 보호함으로써 남의 것을 편취한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세부적 구조는 사적 소유의 확대를 추구하는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남보다 먼저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과 저작물이나 악곡에 대한 저작권은 무형적 창안물인데 정부가 창안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여한 공인 소유권이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지적 재산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권리를 보유한 창안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비싼 사용료는 해당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축시킨다. 창안 독려 유인과 이용 활성화의 유인이 이처럼 상반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보통 일정 기간만 보호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단 등록 상표나 상호는 실질적으로 무기한 보호받는다.

코카콜라의 비방이나 유명 요리사의 비법은 정부 보호 없이도 재산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의 고유능력 또한 정부의 재산권 보호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사유재산이다.¹⁶⁾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마련이다. 재능보유자의 재능은 보유자 자신이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남이 훔쳐보고 모방하면서 배우려 할 수는 있지만 그 학습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적 소유의 유형과 시행되는 모습은 일률적이지 않고 대체로 사회별로 관습의 영향을 받으므로 제법 다양하다. 그러나 누가 소유주인지가 불분명한 자산은 수시로 소유를 다투는 분쟁의 대상이 되기 쉽고 분쟁 중인 자산은 좀처럼 활용되기 어렵다. 부동산의 모든 공동 소유자를 정부 등록문서에 소유자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이집트의 관행(De Sottó, 2000)이나 점포 주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우리나라의 권리금 같은 관행은 자산 활용을 어렵게 하여 생산 활동을 위축시킨다.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경합재(rival goods)를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사용 효율이 크게 낮아지는 ‘역공유자산(anti-commons)’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Heller, 2010).¹⁷⁾

청정 환경은 시민 모두의 소유다. 각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과도한 사용

16) 능력의 사적 소유 문제는 IV.3에서 더 다룬다.

17) Heller(2010)는 반면에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은 경합재를 누구나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과다 사용의 비효율을 빚는 ‘공유자산(common)’ 현상이 나타난다.

은 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공유자산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빚는다.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서 오염 활동, 즉 환경사용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환경을 공유하는 형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사적 소유의 유형별 효과를 잘 분석하여 이기적 개인행동을 사회적 편익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이끄는 소유 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정당한 사적 소유의 생성

사적 소유의 정당성은 신규 취득의 기회균등에서 출발한다. 사적 취득의 자유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허용하는 동등자유 원칙은 사유재산권 제도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출발점으로서 신규 취득의 기회균등은 사유재산권 제도의 핵심이다. 사유재산권 제도를 채택한 사회에서 재산의 신규취득 유형은 누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취득하거나 아직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을 취득하거나 둘 중 하나다. 누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취득을 인정받으려면 원 소유주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재산의 최초 취득은 사회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 인정받는다.

소유주가 있는 재산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시장경제에서 매 생산단계의 투입과 산출은 각각 누군가의 사적 소유물이다. 시장경제의 생산 활동에서 투입의 조달과 산출의 처분은 해당 재산권의 자발적 이전으로 마무리된다. 다만 공해와 같은 외부불경제는 환경훼손에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데 이 사태 역시 재산권의 무단 침해다. 생산 활동을 거치면서 과거의 소유구조는 어느새 소멸하고 새로운 구조가 생성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자유와 사적 소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동학이다. 그 과정에서 재산권 침탈이 없어야 정당한 사적 소유로 이어진다. 즉 구 소유의 소멸은 박탈의 결과가 아니고 신 소유 역시 약탈로 얻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새로운 자원이나 창안은 발견 또는 발명 이전에는 실체가 없으므로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새로운 발명과 발견의 성과는 그것을 발명하고 발견한 사람이 사유하도록 허용한다. ‘최초 점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허권, 저작권, 그리고 채광권 등은 초기에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 이처럼 불확실한 자산은 결과를 감당할 사람이 개발하

도록 ‘최초 점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발명 발견 활동이 시들해지고 그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도 너무 방만하게 집행될 것이다.

물론 취득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기회가 반드시 취득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취득 실패를 부당 배제의 탓으로 돌린다. 물건 값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매할 수 없고 교육 훈련 부족으로 능력이 부실하면 역시 취득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물건 값이나 교육비를 가난 때문에 마련할 수 없었다면 취득 실패를 돈 없는 빈곤층의 부당 배제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빈곤하게 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돈 없고 능력 없는 탓에 당한 배제를 부당 배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약탈적 발원의 존재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원시공동체 시대에는 사적 소유란 공동체를 부정하는 불온한 생각이었다. 소유와 미덕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인식한 플라톤은 사적 소유를 허용하면 이기심이 절제를 잃는다고 보았다(Jowett, 1892). 수렵 채취시대에는 불가능하던 대규모 축적이 농경목축시대에 가능해지면서 이기적 행동이 절제 잃은 약탈로 악화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일탈은 사적 소유의 허용 때문이 아니라 전통적 공동소유의 방식으로서는 대규모 축적의 관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재산권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새롭게 나타난 대형 비축물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공동소유 관리에 빈틈만 생기면 아무나 가지려고 나섰다. 생산하고 저장한 사람이 주인이었어야 하지만 당시 사회는 그 재산권을 공인하지도 보호하지도 않았다. 약탈자는 자신의 물리력으로 약탈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강요했는데 이 소유권 개념은 정당하게 취득하고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현대 문명사회의 소유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문명사회의 소유권은 탐욕을 통제하는 틀인 반면 고대의 소유권은 탐욕적 약탈을 관철하는 강자의 힘이었을 뿐이다. 이 약탈적 연원은 현실 사적 소유구조의 정당성에 엄연한 흠결로 작용한다. 즉 현실 소유구조를 그대로 재산권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과거에 부당하게 취득한 약탈까지도 사회의 보호대상이 되어버린다(De Sade, 1797).¹⁸⁾ 사적 소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점을 내세워 재산권은

누가 뭐래도 결국 약탈적 기득권의 보호 기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사적 소유의 상당부분은 구체제에서 소외되던 시민들이 스스로 비축한 정당한 몫으로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개별 사적 소유의 정당성을 일일이 판별하기 어려운 전환기의 일부에 불과한 과거 소유의 흠결을 내세워 대부분 정당하게 취득한 사적 소유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다.

산업혁명 이후 농업자본의 위축과 산업 금융자본의 확장이 급속히 진행되는데 이 변화는 신흥 소유가 쇠퇴하는 기득권을 압도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과거 세력의 재력은 그동안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막강하였지만 신흥 세력의 엄청난 재력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만큼 왜소한 규모로 영락하였다. 과거 소유가 부당했다는 이유로 현재 소유에 대한 재산권보호를 비판하는 주장의 설득력도 약탈적 기득권에 연원해 둔 부당한 사적 소유가 소멸해 감에 따라 함께 힘을 잃어간다.¹⁹⁾

IV. 경 쟁

1. 경쟁과 양보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上善若水)’고 했다.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으며(水善利萬物而不爭), 남들이 싫어서 외면하는 자리만 찾아가 머무는(處衆人之所惡)’ 물의 원리야말로 ‘최상의 도(道)에 가깝다(故幾於道)’는 것이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남들이 탐하지 않는 것만 취한다면 다툼 일이 없다. 그런데 현실에 흔한 경쟁의 모습은 좋은 것을 서로 가지겠다는 아귀다툼이다.

일상생활에서 아웅다웅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가자는 교훈은 예부터 우리 사회의 도덕 표준이다. 어떤 철학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교훈을 ‘경쟁하지 않음(不爭)’으로 풀고 경쟁은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경쟁시스템에

18) De Sade(1797)은 “*L’Histoire de Juliette*”에서 “Tracing the right of property back to its source, one infallibly arrives at usurpation. However, theft is only punished because it violates the right of property; but this right is itself nothing in origin but theft.”라고 서술하였다.

19) 물론 산업자본의 축적은 노동착취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임금 취업이라도 강제 노동은 아니므로 노동제공은 노동자의 동의를 거친 행위로서 재산권 침탈로 볼 근거는 없다.

들어가서 ‘한 자락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덤비는 일’이라고 인식한다.²⁰⁾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기본 동력은 경쟁이므로 경쟁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풍토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은 쉽지 않다. 경쟁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동양문화권이 특히 더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와 의식에도 경쟁을 배척하는 요소가 강하다. 여기에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가세하면 시장경쟁은 더욱 제한받는다.²¹⁾ 이러한 문화요소가 강화되면 시장경제의 동력인 경쟁은 심각하게 위축되기 쉽다.

그런데 인간생활에서 시장의 역할은 급팽창하고 있고 특히 현대인은 시장을 떠나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늘날에도 시장경쟁을 거부하고 생활물자를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는 동료들끼리 공동체를 결성하여,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규모는 극히 작다. 자발적 경쟁 수용이 대세일 만큼 우리 생활에서 경쟁은 중요하다.

이상적 시장경제가 동력으로 삼는 경쟁은 정확히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원리에 부합하는 다투지 않는(不爭) 경쟁이다. 남들이 이미 점유한 자리는 피하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낮은 자리를 찾아서 머무는 물의 행태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시장경쟁의 면모를 그대로 나타낸다. 시장경쟁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회를 찾는 경쟁일 뿐 결코 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쟁탈이 아니다.

원하는 기회나 물자가 부족하면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이 원하는 것을 가진다. 그리고 이들이 남보다 앞서서 가져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가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모든 이들에게 ‘가지려고 노력할 자유’를 사전적으로 똑같이 허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제로 가지는 자유’에는 ‘동등 자유의 원칙’의 통용이 불가능하다.

자원이 모자라면 나누어 쓴다. 그런데 최대한 나누어 써도 부족할 때의 합당한 대책은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쓰는 것이다. 누군가가 요긴하게

20) 최진석(2016)은 경쟁을 이미 남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다툼으로 보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 정제된 사회일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아무도 차지하려고 덤비지 않는 이상한 곳, 거기에서 혁신의 불씨가 아무도 모르게 자라는데 ‘그 이상한 곳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물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쟁은 좋음이 드러나서 누군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취하려 할 뿐 정작 누구도 모르는 혁신의 불씨는 외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쟁은 본질적으로 소유가 분명한 남의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무단 탈취하지 않고 서로 먼저 혁신하여 그 성과를 거두려고 나서는 경쟁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노자야말로 시장경쟁의 진수를 물의 원리로 잘 설명하고 있다.

21) 공공성 창달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시장경쟁의 인위적 제한조치가 흔히 내거는 명분이다.

쓰긴 써야 하므로 누가 쓰고 쓰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합당한 규칙이 필요하다. 자유와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이 문제를 개인 간 경쟁에 맡긴다. 단 경쟁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쟁은 누가 먼저 차지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경쟁을 금지한다면 부족한 것은 골고루 나누거나, 아예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하거나, 달리 경쟁 아닌 방법으로 사용자를 결정해야 한다. 물자가 더 이상 나뉘이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아무도 못 가지게 처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누가 가질지를 특정 인사 또는 집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개 경쟁에 의한 선정이 훨씬 더 낫다.

2. 사적 소유 확대의 경쟁

사람들은 값진 것을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적 소유를 늘리고 싶다. 다만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값진 것은 으레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가지고 누가 가지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질서가 필요하다. 힘 있는 사람이 물리력을 발동하여 점유하는 질서는 문명사회가 수용할 바가 아니다.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보호하는 시장경제라면 그에 걸맞은 경쟁 질서를 갖추어야 한다.

부족한 것을 서로 가지려 하는 경쟁이 과열되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탈한다. 올바른 경쟁은 철저한 재산권보호 아래 전개되어야 한다. 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보유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쟁은 결국 소유주의 동의를 얻는 경쟁이다. 소유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권을 넘겨줄 때 보통 대가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 경쟁은 소유주가 더 원하는 대가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전개된다.

상품의 구매는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인데 공급이 모자라면 구매자 간 경쟁이 발생한다,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구매희망자에게 상품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경쟁의 승자를 선정한다. 공급량이 수요량을 웃돌면 이번에는 부족한 것이 판매기회다. 공급자들은 판매기회를 잡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승자는 수요자들이 선정한다. 널리 알려진 시장경쟁은 부족한 상품 또는 판매기회를 얻으려는 경쟁이다.

상품이 부족하면 초과수요가 해소될 때까지 공급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더 높은

가격을 경쟁적으로 제안하는 수요자가 계속 나타난다. 만약 판매기회가 부족하면 초과공급이 해소될 때까지 공급자들은 계속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상품 수급의 시장경쟁은 기본적으로 호가경쟁(bidding competition)이다. 품질 개선 및 신상품 개발과 같은 혁신 활동은 새로운 호가경쟁을 유발하려는 노력이고 원가 절감은 공급자가 호가경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만약 승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략을 부려 소유주로 하여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희망자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조성하여 승리를 탈취했다면 그 결과 원소유주와 배제된 희망자의 재산권은 침탈당한다. 이 경쟁은 부당한 재산권침탈을 조장했으므로 불공정하다. 경쟁법이 금지하는 부당 진입장벽은 이처럼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호가경쟁의 승자 선정이 공정하려면 부당 진입장벽 금지는 필수적이다.²²⁾

아직 소유주가 없는 새로 개발될 자원, 신기술, 신상품, 또는 새 아이디어 등도 경쟁의 대상이다. 세상에 출현한 적이 없는 만큼 진가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일단 모습을 드러내면 서로 가지려한다. 그런데 실체 없는 대상의 소유 주장은 허구다. 이 경쟁은 결국 먼저 실체를 찾아내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는 선점경쟁(preemption competition)으로 귀결된다.

실체 탐사활동 역시 자연에 노동을 가하는 로크의 생산 활동만큼이나 구체적 노동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자원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개발권을 가지고 새로운 발상인 경우에도 그 아이디어를 남 먼저 창안한 사람이 소유한다. 발견 또는 발명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같이 허용되고 사회적 공인을 위해서 신고나 특허 취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가경쟁의 승리는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그리고 선점경쟁의 승리는 합법적 실체선점으로 결정된다. 재산권 행사는 관련 당사자들, 그리고 실체선점은 사회의 공인이 있어야 발효한다. 경쟁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재산권 보호다. 정당한 재산권을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하게 침탈하는 경쟁은 공정경쟁이 아니다.

22) 이 설명의 공정경쟁은 진입장벽이 없는 독과점까지 포괄한다. 즉 모든 기업이 경쟁에 참여한 상태에서 독점기업이 독점가격을 책정하더라도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자가 없으면 공정경쟁이다.

3. 경쟁과 능력

경쟁의 승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않으면서 이기는 경쟁자의 능력, 즉 경쟁력에 달려 있다. 공정경쟁에서 원하는 물건의 소유주로부터 선택을 받으려면 소유주가 원하는 대가를 치를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남보다 먼저 신 자원을 개발하거나 신 발상을 창안하려면 역시 그렇게 해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기업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값싸게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경쟁에서 이긴다. 우수한 자질을 타고났고, 탐사 또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개인이나 기업은 새로운 자원이나 발상을 대체로 남보다 앞서서 찾아낸다.

개인의 능력은 천차만별한데 그 차이는 타고나기도 하고 후천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능력이 후천적 노력만의 소산이라면 능력의 우수성에 따라 결정되는 경쟁 결과를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능력의 많은 부분은 타고난 것이거나 부모에게서 직간접적으로 물려받은 유무형적 재산에 의한 것이다. 후천적 재능 습득에서도 그 성과는 보통 개발자가 타고난 자질에 따라 서로 다르다.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능력을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내가 능력 개발에 소홀했던 탓에 경쟁에서 졌다면 패배를 승복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순전히 타고난 불리함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억울함이 앞선다. 이 점을 내세워 타고난 재능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 재능 보유자의 몫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학자도 많다.²³⁾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경쟁에서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재능이 타고난 것이라면 승자의 몫이 온전히 재능 보유자의 것일 수 없고 마땅히 사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재능도 노동해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재능발휘를 유도하려면 그 노고를 적절히 보상해주어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재능발휘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노고에 대한 보상만큼은 재능보유자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만 사회에 귀속시키면 된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의 보상이 재능 발휘 노동의 고통에 대한 몫일까?

노고를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재능발휘가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다. 일상 업무를 평범하게 수행했을 때나 같은 시간 동안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발휘했을 때의 보상이 마찬가지로 특별나게 열심히 재능을 발휘할 유인이 생

23) 이를테면 John Rawls는 이 견해에 동조하는 대표적 학자다.

기 어렵다. 결국 타고났건 후천적으로 습득했건 재능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재능 보유자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상당부분 사장되고 말 것이다.

재능 자체가 재능보유자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유물이라면 소유주인 사회가 해당 재능의 발휘를 명령할 때마다 재능보유자는 항상 그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 즉 재능보유자는 사회의 강요라고 하는 외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개인 자유의 침탈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선천적 재능은 사회의 공유물이라는 발상은 자유를 기본으로 삼는 시장경제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이룬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부당하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능에 대한 재능보유자의 재산권을 부인하면 자유 침탈과 재능 학습 및 발휘 유인 약화를 피할 수 없다. 특히 경쟁력 함양과 발휘의 유인이 사라진 경쟁은 이미 경쟁이 아니다. 경쟁을 동력으로 삼는 시장경제는 개인의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 났든 후천적으로 개발했든, 그 능력 보유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V. 시장경제의 자원배분

1. 시장분업

시장분업의 제도적 토대는 사적 소유와 경제적 자유다. 각 생산단위는 스스로 생업을 선택하고 개별 생업활동 간 조율은 중앙 지휘부 없이 시장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별 단위는 생업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을 지출하여 필요한 생활물자를 구입한다. 시장분업은 각자 자신의 생업에 전문화하고 생활물자의 공급은 개별 생업활동들이 집합적으로 시장교환을 통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생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으로 하여금 보상이 더 큰 생업을 찾아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누구나 더 많은 소득의 생업을 원하므로 경쟁이 불가피하다. 사람들이 서로 사가려고 나서는 상품은 그 값이 오르고 따라서 해당 생업의 보상도 커진다. 반대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으면 해당 생업종사자는 저소득의 고통을 당한다.

이기적 개인을 자유방임하면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므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람마다 돈 되는 상품만 생산하려고 나설 것이므로 자원과 노동은 특정 생업에만 몰려서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정작 필

요하더라도 돈이 안 되는 상품의 생산은 외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과잉생산은 해당 상품의 값을 폭락시켜 그 생업을 돈 안 되는 일로 만들고, 과소생산은 거꾸로 폭등시키므로 해당 생업의 돈벌이가 좋아진다.

사람들은 돈 안 되는 일에서 돈벌이 좋은 생업으로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과소 또는 과잉생산이 발생하면 해당 생업의 생산은 스스로 늘고 준다. 이처럼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므로 자유방임 속에서도 혼란은 오지 않는다. 사회적 필요를 더 많이 충족하는 생업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어 포상하고 반대로 필요를 외면하면 해당 생업을 저소득으로 징벌하는 상벌기능은 시장기제의 핵심이다.²⁴⁾

시장 상벌기능의 동력은 이기적 동기가 유발하는 경쟁이다. 경쟁규칙이 불공정하고 재산권 침탈이 빈발하면 시장은 질체를 잃은 탐욕에 휘말리지만,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면 공정경쟁이 보장되고, 공정경쟁이 움직이는 시장은 인간의 무한욕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동력으로 승화시킨다.

2. 시장의 자원배분과 그 특성

시장은 현 시대 세계경제의 경제활동을 이끌어가는 기본 기제다. 경제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가 시장의 작동과 그 성과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분석한다. 시장의 작동과 운용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존재하지만 가장 흔한 결론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는 있으나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상품별로 사회적 과부족이 발생할 때마다 이기적 시장경쟁이 자원과 노력을 불필요한 용도에서 필요한 용도로 재배치한다면 그 자체가 자원과 노력의 효율적 활용이다. 시장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통념은 바로 이 관찰에서 비롯한다.

또 경쟁은 승패를 가르고 패자는 궁지에 몰린다. 연이어 패퇴하면 결국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적 분업에서 끝내 배제 당하는데 이 배제는 소득 취득 기회의 박탈을 뜻한다. 경쟁이 일부 사람들을 이렇게 배제해버리면 이들의 생계 해결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 측면은 시장 소득분배의 공정성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한다.

24) 그러나 회임기간이 긴 투자에서는 현재의 가격변동이 상벌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몰라서 현금을 쌓아둔 채 투자를 미루면 상벌기능은 오작동 상태에 빠진다.

시장경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시장균형 상태의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일 때마다 효율상태를 지향한 파레토 개선 방식의 재배분이 발생한다는 인식이다. 전자의 견해는 정태적 시각의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the first theorem in welfare economics)’로 잘 알려져 있고, 후자의 견해는 비효율적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에 효율성을 개선할 협력 유인이 작동한다는 ‘코즈정리’식 시각에서 나온다.

일반경쟁균형은 현재의 가격체계에서 누구나 각 재화를 원하는 만큼 사고팔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즉 재화별로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서로 일치한다. 재화별 과부족이 없으므로 (호가)경쟁도 없고 모든 경제주체들은 현재의 상태에 안주한다. 반면에 현재의 상태가 균형이 아니면 부족한 것을 얻지 못한 경제단위가 경쟁을 촉발하는데 경쟁과정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더 좋은 상태를 지향하여 움직여나간다. 경제주체의 선택이 유동적인 만큼 현 상태의 효율성은 의미가 없고 시장동학의 효율지향성이 중요하다.

정태적 시각에서 상정하는 균형은 호가경쟁이 사라진 균형일 뿐이다. 그런데 호가경쟁이 균형에 이르렀더라도 새로운 자원이나 발상을 탐사하는 선점경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누군가 새로운 발견에 성공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는 생산 활동을 시작할 때마다 호가경쟁이 이룩해 놓은 기존 균형은 무너지고 과부족 조정의 시장동학이 발동한다. 시장의 상별기능은 동태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기본 틀이다.

사적 소유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면 모든 사람의 정당한 사유재산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사적 소유가 보편적 권리인 환경에서 개인별 몫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취득과 축적과정에서 다른 이의 사유재산을 침탈하지 않고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면 많은 재산이라도 정당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적은 소득도 부당하다.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의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는 합의과정에서 재산권 침탈이 없으면 공정하다.²⁵⁾ 시장경제의 생산에 관련된 당사자는 생산자와 수요자를 비롯하여 근로자와 원료 공급자 등 생산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다. 생산자는 생산 참여자들과 임금과 원료 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한 후 노동과 원료를 투입한다. 그리고 제품이 생산되면 수요자와 합의한 가격으로 이것을

25) 본 절의 논의는 줄고 “‘정당한 몫’과 인간답게 살 권리”와 본인의 미발표 정년퇴임 고별강연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2010. 06에 크게 의존한다.

판매한다. 즉, 이 생산 활동은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가운데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또한 모든 당사자들 간 합의를 거쳤다. 그러므로 합의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도 없다면 그렇게 결정된 소득분배와 자원배분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공해물질이 나왔는데 이것을 생산업자가 몰래 하천에 방류했고 그 때문에 하천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자. 분명히 피해자들도 해당 생산 활동의 관련 당사자인데 합의과정에서는 비자발적으로 배제된 상태다. 이들은 동의하지 않은 하천오염에 의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탈당한다. 보통 하천오염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하는 외부불경제로만 널리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해치는 재산권 침탈이기도 하다.²⁶⁾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거나, 사용자가 노조의 횡포로 정당한 재산권을 침탈당하고, 또 부품 중소기업이 납품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의 대기업에게 정당한 몫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생산 활동은 외면적으로는 관련당사자들의 합의 속에 진행되었지만 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탈을 은폐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권보호가 실패하면 그 결과로 결정된 사적 소유 실태가 정당할 수 없고 따라서 소득분배도 공정하지 않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합의과정의 정당성(justice)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득을 골고루 누리는 공평성(equity)으로 이해한다. 냉혹한 시장경쟁은 패배자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회적 분업으로부터 배제할 수가 있는데, 시장분업체계가 특정인을 배제하면 그 개인의 생존은 치명적 위협에 직면한다. 합의과정에 정당성 문제가 없었더라도 사경의 패배자를 방치하는 시장의 소득분배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 패배자들을 시장 분업에서 배제시키지 않으려면 이들이 일한 성과를 누군가가 사주어야 한다. 해당 상품을 자발적으로 사줄 사람이 없으므로 강매해야 하는데 강매한다면 강매당하는 사람은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다. 시장배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품의 생산에 최소한 자원과 노력을 낭비한 탓에 부과되는 징벌이다. 시장의 징벌을 거스르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탈해야하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공정성, 또는 공평성과는 다른 기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26) 이승훈, 전개논문들 참조.

3. 부의 편중화에 대한 마르크스의 시각

시장경제에서 무한 탐욕을 통제하는 수단은 결국 신규 취득 질서를 시행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적 소유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사유재산권보호의 실패는 사회 기본질서의 붕괴를 뜻한다. 그런데 부의 편중 분배로 대다수 서민의 재산이 미미한 사회에서 사유재산권보호는 흔히 재산 많은 부유층만을 보호하는 조치로 인식된다. 특히 ‘돈이 돈을 번다’는 생각이 통념화한 세상에서는 현재의 ‘부의 편중적 분배’를 영속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사유재산권보호가 시행되면 사적 소유는 필연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고 만다는 생각은 마르크시즘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구조의 병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으로 결정되고²⁷⁾ 모든 상품의 교환은 그 가치만큼의 대가를 주고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²⁸⁾ 마르크스의 설명이 옳다면 자본가가 100의 노동을 고용하여 생산한 상품의 가치는 100의 노동에 해당하고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그 가치 100 만큼을 대금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고용한 노동에게 그만큼의 가치 100을 임금으로 지불하면 이윤으로 남을 게 없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일한 만큼, 즉 투입한 노동만큼을 그대로 임금으로 받는다 면 자본가에게 돌아갈 이윤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본가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몫, 즉 투하노동량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윤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이윤은 바로 노동착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보유한 자본가는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구축하여 노동자를 착취한다. 자본가는 위계상의 우위를 악용하여 임금 수준을 최저 생존비 수준으로 낮추어 책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 궁핍한 노동자는 사적 축적을 이루지 못하는 무산대증으로 전락하고 자본가는 착취한 잉여를 재투자하여 자신의 자본을 더욱 늘려간다는 것이다. 이 질서에서 사유재산권보호는 가진 것 없는 무산대증의 보호가 아니라 방대한 자본을 보유한 자본가의 보호이자 자본가의 무산대증에 대한 착취구도의 보호일 뿐이다. 이 설명은 과연 옳은가?

27) 이 견해를 노동가치설이라고 한다.

28) 이 주장이 가치법칙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도처에서 수요공급 상황이 ‘교환가치’인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함으로써 스스로 ‘가치법칙’을 부정하기도 한다.

생산 활동마다 노동자를 착취하여 이윤을 만들어낸다면 망할 리가 없는 기업들이 현실경제에서는 수없이 도산한다. 생산 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상품을 팔더라도 그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²⁹⁾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외면하고 사주지 않으면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는 불가능하고 기업은 누적된 손실 속에 도산하기 마련이다.

노동착취가 있었다면 노동착취를 외면한 사유재산권보호는 근로자의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 마르크시즘은 ‘부익부빈익빈’의 착취구도를 종결시키려면 모든 생산수단을 국·공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는 노동자가 제대로 임금을 받도록 근로자의 사유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상품 가치를 투하노동량으로 보는 시각이 오류다. 노동 투하량과 무관하게 동일 상품이라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값이 오르고 반대면 내린다. 상품만 잘 골라서 생산하면 노동 착취 없이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이다. 이윤이 노동착취분이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노동량 100을 투입하여 생산한 상품의 가격이 110이거나 90이면 노동량 100의 가치도 110이거나 90이어야하는데 그렇다면 노동은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

4. 시장실패는 재산권 보호의 실패

시장경제를 논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주제는 시장실패다. 시장실패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영역은 외부성, 독과점, 그리고 특수한 외부성의 공공재 등이지만 어떤 사람은 시장이 경제발전을 이끌지 못한다거나 시장 소득분배가 모든 사람들이 소득을 골고루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현실 시장이 불완전하여 자원배분이 왜곡되었다는 관찰에서 시장은 근본적으로 실패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념성 비판에 이르기까지 시장실패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견해를 포괄한다.

시장이 소망스럽지 못하게 작동하는 면을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시장실패를 정의하는 모든 견해가 공통적이다. 다만 시장실패 해결의 처방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엇갈린다. 한 시각은 시장의 왜곡된 작동을 시정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한

29) 달리 말하면 ‘가치법칙’은 현실과 맞지 않는 틀린 주장이다.

시각은 원천적으로 시정 불가능한 만큼 시장 자체를 폐기하거나 정부개입이 시장을 큰 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는 값을 받고 살 때는 값을 치른다. 그런데 현실경제에서는 대가지불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부성이 종종 나타난다. 시장거래와 달리 남에게 피해나 혜택을 주는데도 대가 지불이 없는 행위가 그대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부당진입장벽 설치로 구축한 독과점은 우수한 라이벌을 배제하고 부당하게 높은 독과점가격을 책정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라이벌과 구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경우에도 시장은 부당한 재산권 침탈을 막지 못하고 피해를 보상하지도 못한다.

이처럼 외부성이나 부당진입장벽에 의한 독과점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피해를 끼치는데도 시장은 합당한 대가지불을 보장하는 데 실패하므로 이 사태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시장실패를 대가지불의 실패로 한정하고 소득집중을 막지 못하는 분배실패의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현실 경제에서 대가지불 실패의 외부성이 관찰되는 까닭은 해당 부문에서 사유재산권이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해물질 배출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폐수의 하천 방출을 탓하면 탓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난받았다. 지금은 공해로 간주되어 공중장소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의 흡연권은 공중장소에서도 당당하게 보호받던 흡연자의 권리였다.

환경오염이 점차 심해지고 일반 대중이 받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환경권은 오염권에 우선하는 중요한 재산권으로 부상하였다.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여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오염자에게 사용 대가를 징수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과거의 재산권 제도, 즉 사적 소유권 제도는 오염행위까지 정당화하도록 환경권을 방치하였지만 지금은 다른 이들의 환경권을 침탈하는 오염행위를 재산권 침탈로 규정하고 단속한다.

외부성의 시장실패는 사유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피해를 당하거나 혜택을 주고도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는 결국 사유재산권 제도의 미비함이 야기하는 재산권 실패다. 재산권을 명확히 확정하고 보호하면 대가를 요구하는 권리자가 생기므로 외부성의 문제는 해소된다. 즉 시장실패의 해법은 대가지불을 요구하는 시장창조(market creation)다.

Coase의 ‘코즈 정리 (Coase Theorem)’는 외부성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대가 지불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음을 보였다 (Coase, 1960, pp. 1-44). 모든 시장 실패가 이렇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과수원 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양봉업자를 자기 사과밭 주변에 유지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Cheung, 1973, pp. 11-33).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사유재산권의 문제는 비단 외부성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주 가운데 등록되지 않은 관행적 소유주를 적법한 소유주라고 인정하는 이집트의 소유제도는 부동산 매입자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가 임대 관행에서 통용되는 권리금 역시 상가를 재건축하는 시점에서는 보호받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가 보호할 수 없는 사유재산은 분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쉬우므로 그 가치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재산권 침탈이 일어날 때 정부 보호를 요청하려면 비용이 든다. 보호신청으로 분쟁을 시작하면 장기적 협력관계의 단절까지 각오해야 한다.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 받더라도 협력관계 단절로 입을 손실이 더 크다면 피해자는 손실 감수가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하고 아예 법적 보호를 요청하지도 않는다. 사유재산권 확정이 분명하고 법적 보호 지침도 확실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보호를 포기하는 법치의 사각지대는 사적 소유에 기반하는 시장경제의 작동에 걸림돌로 남아있다.³⁰⁾

사유재산권 설정이 불명확하고 부당하거나 정부가 보호에 실패하면 탐욕은 생산보다는 약탈과 편취로 사적 소유를 늘리도록 경제활동의 유인을 오도한다. 각자 스스로 지킬 필요가 커지면 생산은 더욱 줄어들고 자원배분은 비효율에 빠진다. 재산권보호의 실패가 경쟁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면 소득분배의 공정성도 훼손당한다. 부당진입장벽과 외부성 등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탈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동시에 훼손한다.

시장실패의 속성은 자유실패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자유실패는 각자 자신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탈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개인이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없는지가 명확히 규정되고 모든 사람이 이 규정을 합리적이고 인정하여 준수하면 자유실패는 일어나지 않는다. 시장실패 역시 각자 가질 수 있고 없는지가 사유재산권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모든 사람이 이 규정을 정당하다고

30) 이 경우 피해 금액만큼만 배상하도록 하는 보상적 배상제도보다는 그 3배, 또는 10배를 배상하도록 조치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해법일 수도 있다.

인정하여 준수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5. 시장과 사회복지

빈곤화의 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내 몫을 부당하게 빼앗기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분업이 나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기도 한다. 개인의 정당한 몫을 부당하게 빼앗는 재산권 침탈은 정부가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재산권 침탈이 없는 가운데 당하는 시장 배제는 내 능력 부족 때문이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해도 내가 일한 성과를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나는 시장분업에서 배제 당한다.

시장 배제를 지속적으로 당한 사람은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비정한 경쟁자에게 따듯한 배려는 없다. 그러나 경쟁탈락자는 죽어도 싸다는 세상이라면 너무 삭막할 것이다. 사회복지는 시장의 냉혹함을 보완하는 따듯한 손길이다. 어려운 이들을 도울 재원으로는 결국 시장분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은 사람들의 주머니뿐인데 이들의 소득은 순전히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얻은 정당한 몫이다. 자발적 기부의 배려를 기대해야지 함부로 징발할 대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부의 분배가 일부에 편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분배구조를 공평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편중을 완화해야 공평해진다고 인식하면 부자의 큰 재산은 환수대상이다. 고소득자들이 모두 다 정당하게 소득을 얻었는데도 이처럼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로 재분배해야 한다면 부자들의 사유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공평성 실현은 공정하지 못하다.

빈곤의 이유가 부유층의 착취 때문이라면 부유층은 착취한 만큼을 빈곤층에 돌려줄 의무를 진다. 이것은 빈곤층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유층의 재산이 빈곤층의 몫을 부당하게 침탈한 것이 아니라면 부유층이 빈곤층을 도울 능력은 갖추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의 재원은 정부가 징수한 조세수입에서 나온다. 그러나 과세 근거는 해당 소득이 남의 몫을 침탈한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회복지가 수혜자의 권리라고 인식하면 ‘복지병’이 시작한다. 일하지 않더라도 부유층의 소득이 빈곤층에게 이전되고 이것이 빈곤층의 권리라면 빈곤층은 일하려 할 리 없다.

빈곤층이 부당하게 착취당했다면 착취당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은 빈곤층의 권리

다. 그리고 이러한 재분배는 편중적 분배구조를 정상화시킬 뿐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성과까지 거둔다. 그러나 부유층의 몫이 착취의 성과가 아니라면 소득재분배는 빈곤층의 권리가 아니라 부유층의 배려라야 한다.

VI. 맺는 말

탐욕은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의 확대를 원하는 본능이다. 사적 소유에 대한 사회의 허용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인간은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 자신의 몫을 늘리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탐욕 근절의 방안으로 사적 소유의 금지가 옳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자유를 허용하면 인간은 본능에 따르기 마련이고 탐욕이 본능인 만큼 결국 사적 소유의 확대를 추구한다. 평범한 대다수의 인류에게 자유는 금욕적 절제보다는 어느 정도 본능대로 살도록 허용된 상태를 뜻한다. 사적 소유를 금지한 공산주의체제가 자유 탄압의 모습을 보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 풀어준 탐욕이 부당강제의 약탈로 일탈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탈하면 오히려 자유의 존재기반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자유와 사적 소유는 허용하되 동시에 탐욕을 적절히 절제함으로써 자유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규 취득 과정에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사유재산권 보호를 보장하면 탐욕은 결코 무분별하게 발호할 수 없다.

현실의 경쟁 유형은 합의하에 재산권을 이전하는 시장거래의 호가경쟁과 신 자원 또는 신 창안의 취득에 대한 국가 공인을 겨냥하는 선점경쟁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정부가 경쟁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경쟁하도록 이끌면 추한 탐욕이 추동하는 경쟁이지만 질서정연하게 전개된다. 재산권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 사적 소유를 허용하면 탐욕은 스스로 절제한다.

시장실패가 재산권보호의 실패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시장성공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가 성공적이면 합의과정이 공정하므로 소득분배도 공정하다. 성공적 재산권보호는 시장실패를 해소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결론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는 있으나 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하지는 못한다'라는 세간의 인식과 매우 다르다.

이 논문에서 상정하는 공정성은 고른 소득분배를 요구하는 공평성과는 다르다.

시장경쟁이 공정하더라도 배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사회복지혜택은 수혜자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배려라는 인식도 중요하다. 상습적 경쟁탈락자가 사회적 분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장의 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탈락자의 책임이다. 시장징벌이 부당하지 않는 한 복지혜택은 수혜자의 권리일 수 없다. 자유와 사적 소유를 침탈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제도화하는 과제가 경제학자들을 도발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1. 이승훈,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정년퇴임 고별강연, 2010, 미간행.
(Translated in English) Lee, Seung-Hoon, *Market Economy and Democratic Politics*, Farewell Lecture on Retirement, Unpublished.
2. ———, “정당한 몫’과 인간답게 살 권리,” 『지성의 지평』, 제11호, 한국학술협의회편, 2011.
(Translated in English) Lee, Seung-Hoon, “‘Due Share’ and the Right to Live Humanly,” *The Horizon of Intelligence*, 11, Hankuk-haksul-hyupuihoe, 2011.
3. 최진석, “가장 탁월함은 물과 같다,” 『계간 철학과 현실』, 제110호, 2016. 9, pp.184-190.
(Translated in English) Choi, Jin Seok, “The Most Excellent is Like the Water,” *Quarterly Philosophy and Reality*, 110, 2016. 9, pp.184-190.
4. 리처드 파이프스(Richard Pipes), 소유와 자유, (서은경 역), 나남, 2008, (원저 Property and Freedom은 Richard Pipes에 의해 2000에 출판).
5. Berlin, Isaiah,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Original published 1958, *Two Concepts of Liberty* by Isaiah Berlin).
6. Carlyle, Robert Warrand and Alexander James Carlyle, *A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eory in the West*, Vol. V, Edinburgh and London, 1928.
7. Cheung, Steven N. S., “The Fable of the Bees: An Economic Investig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16, No. 1, 1973.
8. Coase, Ronald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No. 1, 1960.
9. Harrington, James, *The Commonwealth of Oceana; and a System of Politics*, J. G. A. Pocock, Cambridge, 1992.
10. Hayek, F. 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Original published 1936, *Revolution Betrayed* by Leon Trotsky).

11. _____, "Freedom and Coercion: Some Comments and Mr. Ronald Hamowy's Critique," *New Individualist Review*, Vol. 1, No. 2, 1961.
12. Heller, Michael, *The Gridlock Economy: How Too Much Ownership Wrecks Markets Stops Innovation, and Costs Lives*, Basic Books, 2010.
13. Jowett, B., *The Dialogues of Plato*, III, Oxford University Press, 1890.
14. Locke, John,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Two Treatises of Government (2nd ed)*. A Critical Edi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Apparatus Criticus by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15. Mill, John Stuart, *On Liberty*, Introduction by Alburey Castell, New York, 1947. (Original published 1859)
16. Proudhon, Pierre-Joseph, *What is Property? Or,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 of Right and of Government*, 1840.
17. Rousseau, Jean-Jacques, *Discourse on Inequality*, 1754.
18. De Sade, Marquis, *L'Histoire de Juliette*, Paris, 1797.
19. De Sotro, Hernando, *The Mystery of Capital*, Basic Books. 2000.
20. Spencer, Herbert, *Social Statics: Or, the Conditions Essential to Human Happiness Specified, and the First of them Developed*, Chapman, 1851.

Freedom, Private Ownership, Competition - Resource Allocation of Market Economy*

Seung-Hoon Lee**

Abstract

Freedom and ownership are honored if people have agreed to take hazards created therefrom. System of property right is designed to harness human greed to produce more value without invading others' property right. People compete for owner's consent to transfer property if the target is already owned by an owner, and to discover, invent or devise new resource, technology and idea which is to be owned by the first mover. The competition is fair if no competitor is intruded upon property rights in the process of competition. First Welfare Theorem supports static efficiency by showing competitive equilibrium allocates resources efficiently under no externality. Prize-penalty function of price system raises (lowers) price to encourage (discourage) production in excess demand (supply) to realize dynamic efficiency. People compete for more income to result in resource alloc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Market failure occurs when property rights are unduly violated to make resource allocation inefficient and income distribution unfair. Social welfare benefits are not the right of the beneficiaries but the favor of benefactors under fair competition.

Key Words: freedom, private ownership, competition

JEL Classification: D0, P1

Received: April 8, 2016. Revised: Nov. 22, 2016. Accepted: Jan. 10, 2017.

* This paper is drawn from the note of lecture deliver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KEA in February, 2016. I appreciate the comments from two anonymous referees.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e-mail: shoonlee@snu.ac.kr